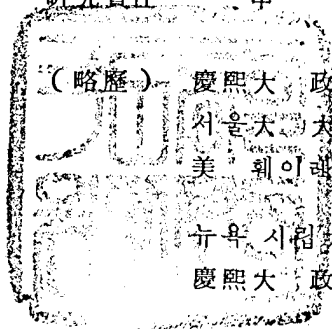


3430
340.911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研究 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 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 金正日體制的 政策方向에 관한 研究

研究責任 申 正 鉉



(略歷) 慶熙大 政外科卒 (1968)
서울大 大學院 政治學科卒 (1970)
美 韋이웨이·디킨슨大卒
政治學 碩士 (1976)
뉴욕 시립大 大學卒 政治學博士 (1979)
慶熙大 政經大 副教授 (現在)

刊行責任 朴 聖 勳

(調査研究室 補佐官)

북한정치체제
김정일체제
북한정치학
북한연립

國 土 統 一 院

目 次

一. 序 言	3
二. 「金正日體制」의 構造的 特性	7
1. 體制構築過程	7
2. 制度的 改編	9
3. 「3大革命小組運動」의 強化	14
4. 技術官僚들 (Technocrats)의 登場	17
三. 「金正日體制」의 政策方向	20
1. 經濟的 側面	21
2. 社會文化的 側面	28
3. 軍事的 側面	31
4. 對外 政策的 側面	34
5. 對南 戰略的 側面	40
四. 結 論	43



一. 序 言

本 研究는 北韓에 있어서의 「金正日體制」의 등장과 그에 따른 政策變化에 관한 方向을 分析, 豫測하는데 그 主된 目的을 두고 있다. 그러한 政策變化의 方向은 다각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즉 金正日을 위로하고 있는 北韓의 權力階層構造에 대한 檢討와 아울러 經濟的, 社會文化的, 軍事的, 外交的 그리고 對南關係 등 諸側面들에 있어 豫測되는 政策變化의 양상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이 問題를 接近하는데 있어 가장 基本的인 前提는 北韓에서 金正日이 權力承繼過程에서 그 位置를 確實히 다졌다는 점이다. 아직도 金正日의 權力承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觀點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그러한 觀點은 두가지로 집약되고 있다.

첫째, 一般的으로 共產體制下에서 現存 指導者의 아들이 權力을 繼承한다는 것은 共產主義 이데올로기 자체에 의해서도 正當化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러한 事例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에서 金正日이 金日成의 權力을 繼承한다고 하는 것은 理論的으로나 現實的으로 어려운 일이며 또한 다른 共產國家들로부터도 支持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主張을 내세우게 된다.

둘째, 비록 現在 狀況으로는 金正日이 黨이나 國家機構에서 第二人者로 부각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現狀은 오직 金日成이 生存해 있는 限해서만 可能的인 일일 뿐 金日成이 죽는 경우에는 豫測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 당장 金日成이 죽을 경우 그의 아들인 金正日이 權力을 계승받게 될 것이라는 可

能性은 極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現在로서 金正日이 그 자신의 支配體制構築에 必要한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近來에 들어 그의 부상은 오히려 金日成의 絶對的 唯一 體制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기껏해야 金日成의 「革命課業」을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는 論理속에서 그의 正當性이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0년 勞動黨 第6次大會나 금년 9·9節 行事에서 보면 金正日이 金日成 다음으로 北韓에서 實權者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黨務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나 中共代表를 비롯한 外國訪問客들을 接待하는데 있어 金正日이 주도적인 役割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가 現在로서는 權力承繼의 기반을 점차 構築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 金正日이 그 자신을 中心으로 한 權力體制를 構築한다고 할 때 이로부터 어떠한 政策들이 결정되고 수행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學問的으로나 政策的으로 중요한 관심의 對象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金正日은 金日成이 취한 政策方向을 그대로 踏襲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金日成의 政策과는 다른 어떤 政策方向을 추구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問題들은 金正日이 北韓에서 權力의 繼承者가 될 것이라고 전제할 때 北韓政治에 대한 研究나 또는 統一 내지는 對外政策을 樹立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本 研究에서는 極히 試驗的으로 두가지 假說들을 제기하면서 주어진 題마를 檢討하고자 한다.

첫번째 假說은 金正日의 政策方向은 金日成의 그것과 그렇게 크게 동떨어진 것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적어도 金日成이 生存하는

동안 金正日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勢力들은 金日成의 政策方向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계승」 「발전」시킨다는 이유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政策遂行의 方法 및 戰略에 있어 다소간의 差異를 보일 可能性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金正日과 그의 支持勢力들은 革命의 第一世代인 金日成과 그의 세대들과는 과거 經驗이나 意識構造面에서 다른 要素들을 內包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假說은 金正日是 그 자신의 支配를 위한 正統性을 金日成의 경우와는 다른 側面에서 추구하려고 할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金日成의 아들로서 「革命傳統의 가문」을 이어 받았다는 것 以外에 金正日是 政策的인 側面에서 과거보다는 합리성이나 效率性을 더 많이 강조할지도 모른다. 흔히 革命의 第一世代들인 레닌이나 毛澤東의 경우 이데올로기性을 강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支配體制에 대한 正統性을 構築한 경향이 강했지만 第二世代들의 경우에는 보다 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政策遂行過程에서 그들의 支配를 正當化하려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런 점에서 보면 金正日是 아직 金日成의 絕對的 支配下에서 存在해 있기 때문에 一般的으로 革命의 第一世代와 第二世代間에 보여 온 차이를 그대로 시현시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나름대로 支配體制를 構築하기 위한 새로운 政策方向을 모색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金正日體制」가 계속 構築된다고 할지라도 소련에서의 「스탈린」과 「후르시초프」 혹은 中共에서의 毛澤東과 鄧小平등의 경우와 같이 理念이나 體制 및 政策에 있어 심한 斷絶現狀이 北韓에서 일어난다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 보다는 「金日成體制」를 이어나가면서 부분적으로 修正, 補完해

나가는 것이 「金正日體制」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政策方向이 될 것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假說들을 立證할 수 있는 具體的인 資料를 提供하고 이를 體系的으로 서술하는 것이 本 研究의 기본과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이 論議되고 있는 바와 같이 一般的으로 社會科學에 있어 分析上 必要的인 資料를 구하는 일은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共產體制 특히 北韓과 같은 閉鎖社會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事態들에 대한 資料蒐集이란 極히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本 研究에서 다루어질 「金正日體制」의 政策方向에 대한 資料 역시 極히 制限된 狀態에 있으며 따라서 얼마만큼 有用한 깊은 分析이 可能하게 될지는 의문을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비록 한정된 영역에서 資料 接近이 可能하다 할지라도 權力繼承과 그에 따른 政策方向에 대해 正確한 豫測을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共產體制에서는 開放體制와는 달리 權力繼承과 政策決定 등과 같은 일들이 두터운 장막에 가려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못지 않게 共產體制에 대한 社會 科學的 研究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바로 分析過程에 있어서 함유되는 주관적 가치판단과 이데올로기의 편견을 여하히 克服하고 비교적 客觀的 立場에서 分析하고 그 결과를 서술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分析과 政策은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相互交換的인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分析이 定해진 政策目標을 위해 행해질 때 그 과정은 결코 包括的이거나 客觀的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分析 자체가 올바르게 행해질 수 없는 한계성을 갖게 된다. 가치의 선택은 政策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分析過程에 이미 함유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이것은 오히려 政策選擇 자체에도 커다란 損失을 가져다 주게 된다. 이런 점에서 本 研究에서는 될 수 있는 限 價値判斷을 배제한 分析次元에서 「金正日體制」의 政策方向設定에 대해 제반 문제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二. 「金正日體制」의 構造的 特性

1. 體制構築 過程

金正일이 金日成의 후계자로 부상되기 시작한 것은 北韓에서 1960年代末 소위 「革命家系」를 내세우기 시작한 때 부터라고 알려지고 있다.¹⁾ 金日成은 1950年代를 통해 자신의 權力體制를 확고히 확립한 이후 점차 一人獨裁體制를 강화해 나가는데 관심을 가졌다. 즉 金日成과 그의 支援勢力은 수차례 걸쳐 그의 政敵들을 숙청하고 唯一體制를 확립하는데 온갖 노력을 집중시켰다. 마침내 1967년에 열린 당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金日成政策路線에 반대한 朴金喆, 李孝淳 등 黨僚派를 제거하고 이어서 16차 全員會議에서 民保相 金昌奉, 代南公작책 許鳳學, 인민군 총참모장 崔光등을 숙청함으로써 金日成은 그를 中心으로 한 唯一權力體制를 일층 더 굳게 確立시킬 수 있게 되었다.²⁾ 金日成은 政敵들을 숙청하면서 그 자신과 그의 家系에 대한 偶像化政策을 전개하였다. 金日成家系의 偶像화는 그의 선조들이 「偉대한 革命傳統」을 세웠으며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위대한 수령」 金日成이 등장하였음을 강조하여 왔다. 「革命家系」의 偶像화는 金日成의 革命課業이 한 세대에서만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앞으로 「金日成家系」에 의해 대를 이어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金正日의 權力繼承에 대한 正當性 賦與와 연결되고 있다.

「金日成家系」에 의한 권력계승 작업은 197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0년 11월에 개최된 勞動黨 第五次 大會에서 北韓의 권력핵심이 金日成과 그의 實弟인 金英柱에게 集中되었다.

그러나 점차 金英柱가 권력구조의 핵심에서 사라지면서 金日成의 아들인 金正日이 등장하였다. 金正日이 北韓權力體制에서 公式的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73年 9월에 열린 黨中央委員會 비공개 전원회의에서 그가 당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비서의 자리를 차지한데서 부터였다.³⁾

또한 같은 해에 金正日은 그와 같은 公式的 地位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당과 별도로 조직·운영된 「3大革命小組運動」을 직접 지휘하게 되었다. 알려진 바로는 1974년부터 北韓은 金正日을 「黨中央」으로 호칭하면서 金日成權力體制的 세습적 계승작업을 진행시켰다.

지난 1980年 10월에 열린 第六次 黨大會에서 金正日은 정치국서열 제4위, 비서국 제2위, 당군사위원회의 제3위 등과 같은 公式的 位置를 점유하였으며 사실상 金日成 다음의 第二人者로 그 地位를 굳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金正日에 대한 우상화과정도 1973년부터 적극적으로 시작되어 1981년에는 그에게 「아버이」, 「영도자」 등의 칭호를 부여하기도 했다.

金正日의 권력계승작업은 매우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가 1973년 公式的으로 당조직 및 선전선동담당비서의 자리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979년까지 그의 이름이 일체의 黨 公式 매체에서 표기되지 않고 다만 「당중앙」이라는 은어가 사용되어 온 점에 비추어 봐서도 그 계획의 면밀성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金正日의 權力繼承過程은 다각적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그의 등장의 理念的 正當性을 발견하는데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북한에서는 金正日이 金日成의 권력을 승계해야 한다는 理由로서 주로 「리더쉽理論」에 바탕을 두고 대체로 다음과 같은 5가지 기준들이 열거되고 있다.

- ① 勞動者의 혁명적 근거는 한 위대한 지도자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전적으로 그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그의 權威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 ② 위대한 지도자의 革命目標의 달성은 오랜시간을 요하며 따라서 그러한 課業은 세대를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승문제는 이러한 혁명과업이 완성될 때까지 올바르게 해결되어야 한다. 만약 계승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지 못한다면 국가의 存亡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 ③ 후계자는 새로운 世代에서 뽑혀져야 한다. 그러한 후계자는 지도자의 思想과 理論을 익히면서 계승준비를 주의깊게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후계자는 미리 선택되어야 한다.
- ④ 계승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은 그가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 ⑤ 후계자는 그 자신이 최고수준의 지도자로서의 力量을 갖추어야 한다. 4)

이상과 같은 기준들을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人物이 바로 金正日이라는 것이다. 한편 북한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후계자선발기준들은 본질적으로 「칼 맑스」理論에 어긋남은 물론 소련이나 中共 등에서 경험했던 革命의 第一世代 이후에 일어났던 상황들을 金日成 자신이 염려한데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후르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格下運動이나 등소평體制에 있어서의 脫모택동傾向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金日成과 그의 支援勢力들은 후계자選擇의 論理를 제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共產體制에서든 현직 지도자의 아들이 그의 후계자로 지정되는 전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北韓에서의 金正日登場은 特異한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세습적 권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에 들어 金正日의 우상화현상이 일층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1975년에 金正日의 생일인 2月 16日을 休務日로 제정한 경우도 金正日의 우상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1980년 제 6차 黨大會이후 그에 대한 상징조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1981년 4월에 들어 北韓 로 동신문은 「金日成 主席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계승해 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金正日각하」라느니 「偉大한 수령 金日成 主席과 친애하는 지도자 金正日 각하의 만수무강을 빈다」는 등의 표현을 쓰기 시작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金正日이 명실공히 金日成의 후계자임을 公認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풀이해 볼 수 있다. 1982년 2월 15일에는 「中央人民委員會 政令」을 발표하여 「金正日 생일 40돌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함과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1급을 수여」함으로써 金正日에 대한 권위조작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⁵⁾ 북한에서 「공화국 영웅칭호」와 「國旗勳章」과 같은 최고훈장이 수여된 것은 1953年 金日成에 이어 金正日이 두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지도자의 思想과 理論」을 충실히 익히고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金正日을 「金日成이 이룩한 主體의 혈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서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1982년

3월 金日成의 70회 생일을 기념하는 이른바 「주체사상에 관한 전국 지역 토론회」에서 金正日이 집필했다는 「主體思想에 대하여」라는 題下의 論文을 지나치게 찬양한 데서 잘 나타났다. 이 論文에 대해 북한 의 선전매체들은 金正日의 「노작」이며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체계화한 불멸의 고전적 문헌」이라고 찬사를 덧붙였다. 北韓의 선전매체들이 이와 같이 金正日의 論文에 찬사를 덧붙이는 理由는 ① 金正日을 思想家로 널리 알리고 ② 金正日이 주체사상에 대한 有權解釋權을 가지며 ③ 그리고 金日成死後에도 金正日이 주체사상을 제승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데 있었다고 풀이될 수 있다.

2. 制度的 改編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 6차 黨大會에서 金正日은 黨秘書局 서열 제 2위로 부상됨과 아울러 그의 권력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직 및 지도층개편이 단행되었다.⁶⁾

첫째, 朝鮮勞動黨의 최고정책결정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래의 黨 「政治委員會」가 「政治局」으로 개칭되었고 이의 구성원들도 대폭 증원되었다. 예를 들면 70년에 열린 第五次 黨大會에서 政治委員會의 위원은 15名이었으나 제 6차 黨大會에서 「政治局」의 局員은 34名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정치국원의 수가 대폭 증가된 것은 종전에 비해 軍部出身이 많이 기용된데 기인되고 있으며(34명중 10명) 이는 결국 金正日體制의 구축을 위한 軍部支援基盤의 擴大와 연관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둘째, 「政治局」을 擴大하는 한편 여기에 5名으로 구성된 「常務委員

會」를 신설하여 이들이 黨權단이 아니라 北韓權力體制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5인의 구성원들을 서열로 보면 主席 金日成, 副主席 金一, 人民武力部長 吳振宇, 金正日 그리고 首相 李鍾玉으로 되어 있다.

政治局 常務委員會에서 金正日의 서열이 제 4위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金日成을 대신해서 金正日이 실질적인 權限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金正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두 70대의 연로한 계층이며 특히 金一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金一이 黨務, 吳振宇가 軍事, 李鍾玉이 行政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金日成과 金正日是 政治局, 秘書局, 軍事委員會에 소속됨으로써 사실상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位置에 있게 되었다. 公式的으로 黨序列 2位인 金一은 秘書局 및 軍事委員會에서 그리고 3位인 吳振宇는 秘書局에서 제외되었다.

세제, 秘書局내 「군사담당비서제」를 폐지하고 종래 비서국의 군사업무를 黨 軍事委員會에 이관시켰다. 10명의 黨秘書局員중 軍事人物이 하나도 없으며 또한 세대적으로도 金日成을 제외하고는 革命第一世代가 전혀 없고 모두 戰後世代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제 5차 黨大會에서는 10名중 6名이 혁명세대이고 4名이 戰後世代였었다. 이는 北韓의 權力構造가 새로운 世代인 金正日을 中心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金日成과 金仲麟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의 비서국원들은 黨과 行政部에서 判료경험을 가진 새로운 人物들이다. 새로운 人物의 기용은 黨 政治局의 구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34名の 정치국원중 24명이 새로운 인물들이고 金日成과 같은 세대의 소위 「혁명투쟁」의 경험을 가진 인물들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째, 第 6 次 黨大會를 기점으로 해서 北韓權力體制에 軍部 및 經濟人物들이 많이 기용되었다. 10 名의 軍事人物이 黨 政治局에 충원된 것 이외에 19 名 黨 軍事委員會의 전원이 현역 또는 군고위층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政治局員 34 名 중 12 名이 경제인물들이며, 黨 中央委員會 총 248 名 중 27%인 65 名이 경제인물로 나타났다. 이는 北韓이 앞으로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重點을 두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北韓權力體制에서 世代交替가 擴大되고 있음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이는 金正日의 권력계승문제와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중요시될 수 있다. 제 6 次 黨大會에서 黨 政治局, 黨 軍事委員會, 黨 中央委員會에 새로운 世代들이 크게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黨 政治局員중 70 代가 4 名인 반면 50 代가 16 名으로 47%를 차지하였다. 당중앙위원회의 경우는 총 248 名 중 70%인 175 名이 신진세대들로 구성되었으며, 약 3 백만명에 달하는 勞動黨員들 중에도 점차 「3 大革命小組員」들을 비롯한 새로운 世代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알려졌다.

黨 軍事委員會에서도 金日成과 그의 세대들은 8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세대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黨의 주요부서인 정치국을 비롯한 군사위원회, 中央委員會에서 金正日과 學校동창인 「萬景台革命學院」의 출신들이 크게 기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金正日의 權力基盤을 견고히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金正日體制的 確立에 있어 가장 중요한 變數로 작용할 것으로 알려졌던 北韓軍部に 대한 金正日의 통제장치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한

장치는 지난 82년 4월 5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 회의 결과에 나타냈다고 한다.⁷⁾ 이 회의는 政務院의 직제를 개편하여 人民武力部와 사회안전부를 黨 비서국의 관할로 이관시켰으며 그 결과 金正日이 사실상 북한의 군부세력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黨 秘書局에서 金正일이 全權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인민회의의 이와 같은 조치는 金正日과 그의 支援勢力들이 80年度에 열린 黨大會에서 黨權을 장악한 이후 점차 軍部를 비롯한 北韓社會의 武裝力에 대한 支配와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3大革命小組運動」의 강화

1970年代에 北韓社會 전역에 걸쳐 전개된 「三大革命小組運動」은 기존 黨 조직과는 별도로 「黨中央」으로 알려진 金正日에 의해 직접 조직되고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의 體制登場이나 政策方向을 투시해 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래 「3大革命小組」는 金日成이 내세운 思想, 技術, 文化의 소위 「三大革命」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된 것이다. 이 운동이 처음 조직된 것은 1973년 2월 12일에 열린 黨 中央委員會 部長協議會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로 그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75년 2월에 열린 黨 第5期 10次 全員會議에서 부터라고 한다.⁸⁾ 그간 알려진 바로는 「3大革命小組」는 처음 「지도소조」라는 이름으로 黨 核心과 大學生들로 구성되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파견되었으며 점차 그 조직기반이 「黨 일군·국가경제일군들, 대학생·대학교원, 공장·기업소의 기술자, 과학자」들로 擴大되었다. 이 중 약 90%는 청년인테리(大學卒業生과 大學生)

들로 구성되었고 1個 小組에는 규모에 따라 약 20 ~ 30 명에서 부터 50 명까지로 구성되었다. 과건영역도 人民經濟部門에서부터 行政機關 및 各 級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그 총수는 1975 년에 수만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小組」조직은 기존 당조직과는 별개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조직원들은 협동농장에서는 黨細胞를 조직하고 郡에 黨 委員會를 조직하며 또한 道·市·郡에 「3大革命小組」의 지휘부를 두도록 되어 있다.

「三大革命小組運動」의 기본목표는 金日成이 주장한 바에 따라 「간부들을 잘 도와주어 그들이 保守主義, 경험주의를 비롯한 낡은 思想을 버리고 黨이 요구하는대로 일을 잘 하도록 하는데 있다」⁹⁾고 한다. 구체적으로 「小組運動」은 思想革命에서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강조하고 技術革命에서는 現代科學知識의 습득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文化革命에서는 工場 및 企業所에 있어서의 「生動文化와 生活文化」의 향상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三大革命小組運動」은 소위 「三大革命 붉은旗 爭取運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速度戰 및 思想戰의 원칙」을 구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金日成이 감행한 「천리마運動」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경제 및 문화전설과 군사력 증강에 있어 「일대 비약」을 가져오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다.

金正日의 권력계승작업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三大革命小組運動」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첫째로 「3대혁명소조운동」은 기존 당 조직과 별개로 조직·운영되면서 「黨中央」인 金正日에 의해 직접 지휘·감독을 받음으로써 초기 단계에서 黨의 기반이 약했던 金正日로 하여금 黨 밖에서 그의 支持基盤을 擴大하

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三大革命小組運動」은 비교적 젊은 世代들로 각 분야에서 조직됨으로써 그야말로 「集團的으로 革新運動」을 일으키는데 관심을 갖는 동시에 黨內外에 걸쳐 기존세력들을 견제 내지는 축출하기 위한 세력들로 작용할 수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金正日과 그를 둘러싼 第二世代들의 등장에 「三大革命小組運動」은 최소한 막후기반으로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로, 「三大革命小組運動」은 실제로 그 成果가 어떠한 金正日의 支配能力 向上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 운동조직이 각계를 포괄한 젊은 인테리들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각 분야에 파견되어 활동함으로써 이로부터 얻은 갖가지 經驗은 적어도 金正日體制의 앞으로의 政策選擇이나 方向設定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三大革命小組運動」은 처음부터 金正日과 그의 支援勢力들의 권력장악을 위해 계획·추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그러한 目的에 상당한 程度로 기여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三大革命小組運動」이 金正日體制의 구축에 필요한 政治的 基盤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 運動이 소위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동시에 점령하여 北韓에서 「높은 水準의 生産力」을 달성하는데 어떤 限界性을 안고 있었음을 잘 입증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천리마運動」에 덧붙여 「速度戰」이 첨가되어 生産增大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현재 北韓은 어느 요새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金正日體制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난제중의 하나로 과연 「思想」과 「物質」의 두개의 수레바퀴를 함께 굴러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전자보다도 후자를 강조하여 경제건설에 보다 많은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기본방향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技術官僚들 (Technocrats)의 登場

金正日體制의 구축과정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새로운 교육배경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北韓의 權力體制 속에 크게 진출해 있다는 사실이다. 黨 政治局, 비서국, 군사위원회 등에서 이들의 진출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팔목할만 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金日成과 같은 革命世代들은 이미 매우 연로하여 얼마 안있으면 權力構造에서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신진세대들은 金正日을 포함해서 비록 소위 「혁명적 투쟁」의 경험을 갖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비교적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또한 해외여행 등을 통해 외부세계와의 접촉도 상당히 갖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세대들은 종래의 革命世代들과는 달리 기술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역사적 경험에서 보면 전세대들에 비해 덜 교조적인 반면 보다 더 實用主義性格을 內包할 수도 있다고 보겠다.¹⁰⁾ 물론 그들의 行態가 얼마만큼 덜 급진적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은 별도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급진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것이 第一世代들의 경우에는 교조적인 성격을 띄고 나타나는 반면 第二世代들은 실용적인 路線에 바탕을 두고 행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金正日이 여전히 급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分析은 그것이 金日成이

과거에 보였던 교조주의적 행태와는 區分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결과적으로 行態面에서는 다같이 급진적일지라도 그러한 행태를 유발시키는 動機面에서 金正日은 金日成보다는 現實的인 계산에 근거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北韓 專門家의 분석에 의하면 기술관료 계층으로 특장지워지는 北韓의 「새로운 支配階層」의 행태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 ① 그들은 革命世代와 마찬가지로 黨과 革命目標에 대해 강력한 忠誠心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成長背景 및 교육과정을 고찰해 볼 때 共產主義 이데올로기 및 金日成主體思想에 의해 改化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北韓社會의 全體主義的 構造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혁명과정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보다 安定된 상황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革命世代들 보다 더 現實的이고 실용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世代들은 革命世代들 보다 온건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덜 非論理的일 수 있다.

- ② 그들은 革命世代들 보다 더 국제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동시에 그에 대처하는데 더 많은 융통성을 갖고 對處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전혀 정규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平生을 「혁명적 투쟁」에 종사해 온 革命世代들과는 달리 外部的 狀態를 인식하는데 있어서나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 구체적 사실과 경험에 바탕을 두게 될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새로운 世代들은 北韓에서 支配階層의 후손들로서

소련이나 동구국가에 유학해서 정규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특권을 누려 왔으며 이러한 배경은 그들로 하여금 外部世界와 보다 더 적절한 교류를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 결과 현재의 폐쇄적인 北韓社會의 변화에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른다.

- ③ 장기적으로 보면 北韓의 새로운 기술관료계층들은 南北韓關係에 있어서나 西方世界와의 관계에 있어 그리고 北韓社會의 內部的인 구조변화를 도모하는데 있어 革命世代들 보다는 더 넓은 行動의 自由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현재 金日成思想에 의해 고도로 경직화된 北韓社會에 어떤 새로운 變化를 일으켜 소련·中共 및 東歐圈의 국가들의 경우처럼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시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당장 이러한 일이 北韓에서 일어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적어도 金日成이 살아있는 한 그러한 기대는 現實로 나타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새로운 支配階層이 위에서 열거한 心理的 屬性을 갖고 北韓의 政策決定過程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해 볼 때 「金正日體制」의 政策方向도 제한된 범위안에서라도 어떤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三. 「金正日體制」의 政策方向

비록 「金正日體制」가 확립되었다 할지라도 그 體制가 政策面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나가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理由들 때문이다. 첫째로 金日成이 여전히 生存해 있으며 실제로 政策決定에서 그가 절대적인 權限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金正日體制」의 등장은 기본적으로 金日成의 支配體制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당장 金日成의 政策基調에서 이탈하여 金正日과 그의 支援勢力들이 새로운 政策을 추구하기는 힘든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스탈린이 취한 「一國社會主義政策」이나 등소평과 그의 支持者들이 취한 「실용주의정책로선」 그리고 東歐諸國들이 취한 脫스탈린化와 「半中央集權의 管理體制」 및 「市場社會主義政策」¹¹⁾ 등과 같은 획기적인 政策變化를 金正日體制가 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金正日體制」가 그동안 金日成을 비롯한 革命世代들이 취한 政策들이 빚어낸 과오나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데서 그의 效率性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正統性의 기반을 견고히 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金正日體制」의 政策方向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北韓政治體制의 연속이라는 측면에서 그 기본적 틀을 설정하게 될 것이며 결코 급진적 단절현상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金日成死後를 포함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金正日體制」가 지속된다고 보면 전적으로 革命世代가 추구해 온 政策路線과는 다른 政策들이 수행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다른 공산주의국가들의 경험

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變化를 제외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金日成-金正日體制」의 테두리 안에서 추구될 政策方向을 경제, 사회문화, 군사, 外交 및 對南戰略 등의 세 측면들로 나누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러한 측면들에서 현재 北韓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떠한 것이며 이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어떠한 政策手段들을 강구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1. 經濟的 側面

북한의 경제체제는 여전히 「全體的 中央統制經濟體制」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스탈린式 計劃經濟體制」를 유지시키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는 계획을 수립하는데서부터 그러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데 이르기까지 中央經濟機構의 철저한 통제와 명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경제체제는 국가주도 또는 「國家命令 中央集權的 經濟體制」라고 규정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이러한 點에서 매우 특이하다. 東歐諸國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이 종래의 「스탈린式 中央集權的 經濟體制」를 탈피하여 市場原理를 도입하거나 혹은 地方分權化를 구조적으로 도모하는 일련의 경제개혁을 시도해 왔다. 예를 들면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고슬라비아는 市場社會主義 (market economy) 體制를 채택하고 있으며 헝가리는 管理分權經濟 (administrative decentralized Economy) 體制를 채택하여 다 같이 程度는 다르지만 일종의 分權的 經濟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北韓의 중앙집권적 計劃經濟는 적어도 1950년대와 60年代를 통해 어느

정도 成果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北韓經濟專門家들의 分析에 따르면 그러한 경제계획에 따라 北韓住民들은 의·식·주와 의료 및 교육 등의 분야에서 최소한의 기본요건들은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¹²⁾ 戰後 경제복구계획을 추진하면서부터 北韓은 중공업 우선政策을 채택하여 적어도 1960年代까지 이 분야에서 어느정도 成果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경공업분야에서 북한은 낙후성을 면치 못했으며 그 결과 북한주민의 消費生活水準은 비록 최소한의 요건들은 충족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특히 1970年代에 접어들어 北韓經濟는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北韓의 中央統制에 의한 계획경제가 스스로 어떤 한계성을 내포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직된 中央計劃經濟體制는 어떤 危機를 극복하여 일정한 발전수준을 이룩하는데는 有效性을 가질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는데는 어떤 問題點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고도의 産業技術을 개발시킨다든가 혹은 경제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資本을 동원하는데 있어 과도한 中央集權的 經濟體制는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北韓의 경우도 결코 例外가 될 수 없다.

최근에 들어 北韓經濟의 침체성은 바로 기술이나 자본의 부족 그리고 産業活動에 있어 자극(incentive)의 결여등에 기인되고 있다. 北韓에 있어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는 모든 個別企業의 생산목표를 세밀히 규정하고 그의 달성을 직접 中央機關이 지도·명령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생활의 전체를 엄격히 관리·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에 있어 企業活動이나 국민경제생활에서 個人의 자극이나 創意性이 결여되게 되며 그 결과 더

이상의 경제발전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북한경제의 곤란성은 약 24억 불에 달하는 外債에 대한 支拂能力의 결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韓國經濟에 비해 국민총생산이나 개인국민소득에 있어서도 북한경제가 크게 뒤지고 있음이 통계수치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1980년에 한국의 국민총생산액은 약 574억 불에 달한데 비해 북한의 경우는 약 135억 불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인당 국민소득도 한국은 약 1,506 불인데 반해 북한은 약 758 불인 것으로 알려졌다.¹³⁾

북한은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속적인 成長을 기하기 위해 1978년부터 第二次 7個年經濟計劃을 추진하고 있다. 第二次 7個年 경제계획의 주요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인민경제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를 촉진시켜 사회주의 경제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킨다.
- ② 기존 工業生産能力을 최대로 利用한다.
- ③ 電力工業과 採取工業의 우선적 발전을 도모하여 연료, 에너지, 기타 공업자원의 기초를 확고히 한다.
- ④ 낡은 技術을 새로운 技術로 대체하고 전반적인 기계화와 생산공정의 自動化, 半自動化를 실현하며 원격제어장치를 폭넓게 도입함으로써 工業의 현대화를 이룩한다.
- ⑤ 現代科學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工程過程의 활용 및 전부문에 걸친 工業生産方法을 튼튼히 한다.
- ⑥ 輸入原資材를 국내자원으로 대체시킨다.
- ⑦ 철도, 트럭 및 해상운송에서 화물수송량을 늘리며, 운송방법의 集中化 콘테이너화를 추진해 나간다.

⑧ 農業에서의 기계화, 현대화를 꾸준히 지속하며,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농업에서의 기술혁명을 가속화한다.

⑨ 대규모적인 自然改造計劃을 성공적으로 달성한다.

그리고 이 경제계획이 구체적으로 달성할 주요목표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다.

① 7개년 계획이 끝나는 1984년의 국민소득을 1977년의 1.9배 수준으로 높인다. (년간 成長率 9.6%)

② 1984년의 工業總生産額은 1977년에 대비 2.2배의 수준으로 증대시킨다. (년간 成長率 11.1%)

③ 곡물 收穫高는 1984년까지 1,000만톤 수준으로 늘린다. (년간 成長率 2.4%)¹⁴⁾

이상과 같은 第二次 7個年計劃에서 北韓이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기술개발과 自立經濟體制의 確立, 그리고 人民生活水準의 向上 등이 라고 集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계획의 목표설정은 바꾸어 말하면 현재 北韓經濟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반영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第二次 7個年經濟計劃의 主要原則들은 80년에 열린 第6次 黨大會에서도 北韓의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再確認되었다. 동 黨大會에서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經濟政策의 기본방향으로 「自立經濟體制」의 강화와 「全人民的 所有制」에로의 移行을 강조했다. 그들은 「自立經濟」를 위해 이미 7個年 計劃에서 제시된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 등을 내세웠으며 그리고 점차적으로 「全人民的 所有制」(國有化)를 擴大할 것을 주장했다.

北韓이 내세운 경제의 「主體化」란 자체의 자원, 연료, 動力資源 및 기

술개발에 의거해서 自立的 經濟土臺를 구축하는 것을 말하며 「現代化」는 낙후된 기술을 先進科學技術로 발전시켜 전반적으로 경제의 기술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科學化」는 生産과 경영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뉘어 규정되고 있는데 生産에 있어서는 科學技術工學의 급속한 발전과 적용을,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는 전자계산기 등을 도입하여 計量規則制度를 확립함과 동시에 경영의 合理化를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한편 「全人民的 所有制」의 실현은 1972년 北韓의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¹⁵⁾ 協同農場 등과 같은 協同團體所有를 점차 「全人民的 所有制」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全人民的 所有制」의 擴大, 實施는 農民階層을 조직화하여 勞動力動員을 극대화 시키면서 사회주의 경제적 기반을 견고히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에 있어서 國營農場制가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北韓이 「全人民的 所有制」에로의 이행을 통해 어떠한 效果를 거두게 될지는 의문시된다고 보겠다.

현재 북한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추진하고 있는 경제계획의 內容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金正日體制」가 채택할 政策方向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 ①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思想的 要素가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金正日體制」는 경제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느 程度의 融通性和 實用主義的 路線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제분야에 있어 現代化 내지는 科學化를 기하기 위해서는 「政治優位の 戰略」 보다는 「經濟優位の 法則」에 의거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北韓經濟構造 자체가 복잡하게 됨으로써 실용주의로선에 입각한 政策選擇은 불

가피하게 될지도 모른다.

② 「金正日體制」는 外貨獲得能力을 증진시키기 위해 輸出增大에 보다 많은 관심을 증대시킬 것이며 또한 先進國家들(西方國家들 포함)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데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輸出增大運動이 전개되었으며 1979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30%의 수출신장율을 보였으며 80年代에 있어서는 年平均 15.5%의 수출신장율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北韓은 1980년도 유엔開發計劃(UNDP)으로부터 技術援助 885만불을 받아 항만·철도 및 電子工業開發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¹⁶⁾

③ 海外로부터의 기술도입과 더불어 國內科學技術의 개발에도 보다 많은 投資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제기되는 기본적인 문제는 北韓의 과학자와 기술자들간에서 나타나는 「受動主義, 保守主義 및 技術神秘主義」 등 기술발달의 저해요소를 여하히 극복하느냐에 있다. 北韓은 어느 공산국가들 보다도 가장 경직된 中央集權的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本質的으로 非物質的 報償體系를 강조하고 있다. 만약 기술개발의 문제에 있어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이 결여된다면 北韓의 경제체제는 결코 침체현상은 克服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金正日體制」는 경제분야에 있어 主體思想과 같은 이데올로기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할지라도 기술개발과 경제성장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물질적 자극의 제공과 더불어 合理的 管理體制의 확립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北韓은 물질적 자극방법으로 공업분야에서 일종의 都給支拂制로서 獨立採算制와 농업분야에서 分組管理制등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주로 두가지 이유

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하나는 北韓의 政治 및 경제 분야에서 전문적 기술관료계층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미 국가임금제와 家系中心의 영농제를 채택하고 있는 中共으로부터의 영향이다.

- ④ 「金正日體制」는 북한경제가 공업과 농업, 중공업과 경공업간에 균형된 성장을 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北韓은 대체로 현재까지 스탈린方式에 따라 重工業優先政策을 추구해 왔으며 또한 농업생산에 비해 공업생산에 보다 더 치중해 왔다. 그 결과 1950년대와 1960년대를 통해 重工業은 어느정도 발전해 온 반면 경공업은 낙후될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北韓住民들의 生活水準도 낮은 단계에 머무르게 되었다. 제2차 7個年計劃에 있어 「人民의 生活水準의 向上」을 강조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不均衡的 經濟開發戰略의 必要性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까지도 자료에 의하면 공업생산과 농업생산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78년부터 1980년까지의 3년 동안 제2차 7개년계획기간 중 工業總生産額은 년평균 계획 12.1%보다 더 빠른 16.3%로 성장을 보여 왔다고 발표하는데 비해 곡물생산의 경우는 2.4% 계획에 1.9%의 성장을 보였다.¹⁷⁾ 北韓當局은 제2차 7개년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農業生産을 위해 農業의 集約化와 科學技術의 도입에 계속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동 계획이 끝나는 1984년에는 1000만톤의 양곡 생산목표를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1980년 北韓의 곡물생산량이 371만톤에 지나지 않았음에 비추어볼 때 과도한 계획임을 알 수 있다.

2. 社會文化的 側面

북한헌법 제 1 조에서는 북한이 「自主的인 社會主義國家」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헌법 제 49 조에서는 북한住民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두 헌법조항은 서로 상치되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이 겉으로는 自主的인 國家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 주민의 自由와 權利는 제 49 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全體主義的 社會를 위해서만 존재하며 또한 個人의 利益은 全體的 利益이라는 명목하에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칼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와 「브르제진스키」(Zbigniew Brzezinski)의 모델을 빌릴 필요도 없이 北韓社會가 全體主義的 體制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48년 北韓政權이 공식적으로 成立된 이래 北韓社會는 철저하게 勞動黨에 의해 조직·動員 統制되어 있으며 이는 곧 金日成의 唯一體制로 이끌려지게 되었다.

크게 보아 北韓의 全體主義的 社會構造의 형성은 두가지 方法들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黨組織이나 國家行政機關들에 의한 북한주민들의 조직화와 통제강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金日成의 主體思想에 의한 教化過程이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勞動黨의 세포조직들과 「직업총동맹」이나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등과 같은 黨의 외곽단체들 그리고 中央機關에 의해 엄격한 통제를 받는 地方行政機關들은 모두가 북한사회를 全體主義體制로 전환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에 대한 세밀한 階層區分¹⁸⁾과 五戶擔當制¹⁹⁾등을 실시하여 그들에 대한 감시수단을 制度化시키고 있다.

制度的 裝置에 의한 주민통제 및 動員 이외에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주민들을 「共產主義 人間型」 혹은 「金日成唯一體制에 순종하는 人間型」으로 만들기 위해 소위 政治敎養敎育을 강화시키고 있다. 北韓에서 발간된 「社會主義敎育學」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政治敎養敎育의 목적은 ① 全人民의 共產化 ② 全人民의 革命化 ③ 全人民의 勞動階級化 등 세가지로 집약되고 있다.²⁰⁾

北韓에서 政治敎養敎育의 내용으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소위 「金日成主體思想」이다. 근래에 들어서는 「맑스-레닌주의」보다도 北韓에서는 金日成主體思想이 일층 더 크게 강조되고 있다. 지난 第6次 黨大會에서도 「온 사회의 主體思想 一色化」가 앞으로 北韓社會建設의 總路線이라고 규정하였다.

그 밖에도 北韓社會는 「千里馬運動」에서부터 「三大革命小組運動」 「붉은旗 爭取運動」 「四大軍事路線」 등 일련의 대중동원 운동을 통하여 集團主義的 凝結力(solidarity)을 다지는 동시에 全體主義 統制體制를 유지시켜 왔다.

「金正日體制」의 政策方向도 근본적으로 全體主義的 社會체제유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와 같은 社會體制維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두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나는 「金正日體制」 자체도 바로 全體主義的 社會體制的 產物이라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金正日 자신의 支配의 正統性이 취약한 점이다. 다시 말해서 金正日의 권위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에 反對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움직임을 철저히 防止하기 위해 「金正日體制」는 보다 더 강력한 社會統制手段을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金正日體制」는 暴力을 포함한 강제적 수단에 의한 社會統制 뿐만 아니라 社會文化的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들도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次 黨大會에서도 人民生活向上이 「黨의 最高原則」이라고 강조되었으며 따라서 앞으로 「金正日體制」는 이를 위해 보다 많은 政策的 배려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몇가지 선택될 政策內容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農村의 生活水準向上을 위한 交通망, 수도시설, 의료시설등의 擴充
- ② 住宅建設 및 消費品生産의 增大
- ③ 北韓住民에 대한 高等義務教育制度의 확대적용
- ④ 靑少年들에 대한 思想教養教育 및 運動強化
- ⑤ 出版 및 印刷事業의 강화

결국 「金正日體制」는 사회적으로나 文化的으로 회유와 위협 (carrot and stick)의 두가지 수단들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 體制 자체의 유지를 위해서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3. 軍事的 側面

앞으로 「金正日體制」는 軍事部門에 대한 정책수립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金正日後繼體制」確立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軍部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金正日是 아직 젊은 世代에 속해 있으며 또한 軍대경험이 약하기 때문에 거대한 北韓軍部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시되고 있다.

北韓은 다른 어느 分野보다도 군사력증강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北韓軍事力은 北韓의 경제력이나 人力規模 등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水準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北韓은 총 784,500 명의 병력과 2,500 대의 탱크, 740 대의 전투기, 448 척의 함정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²¹⁾ 이는 경제능력이나 인구수에 있어 월등히 우세한 한국의 경우보다 北韓이 훨씬 많은 軍事力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北韓의 軍事力增強은 그 만큼 북한내부에서 군부의 세력이 증대함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軍部에 대한 「黨優位の 原則」이 북한權力構造에서 적용되어 왔다. 「金正日體制」에 있어서도 「黨優位原則」은 계속 지켜질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金正日 자신의 군부에 대한 세력확대도 이루어 질 것이다. 만약 金正日과 그 支持勢力이 北韓軍部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그의 후계체제는 결코 安定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北韓軍部內에서도 革命課業이 세대를 통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으며 軍은 「黨中央」에 충성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

다. 制渡的으로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人民武力部가 金正日이 총책으로 되어 있는 黨 秘書局 산하로 들어감으로써 金正日의 군부에 대한 支配는 일층 더 공고해 지고 있다.

이미 제 6차 黨大會에서도 黨 軍事委員會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종전에는 軍事委員會는 黨 軍事政策決定, 軍需産業 및 군사력 증강등에 대한 조직지도의 기능만을 수행하게 되었으나 동 黨大會以後에는 軍事作戰 및 지휘기능(軍令權)까지도 수행하도록 되었다. 軍事委員會 구성에 있어서도 종전의 黨·政·軍의 主要人物들로 구성된데 반해 동大會에서는 대체로 軍團長級 및 각군 중층 사령관급 인물들을 포함시켰다. 특히 19명으로 구성된 軍事委員會에서는 金正日을 지지하는 5명의 「萬景台 革命學院」출신들(吳克烈, 김강환, 김일철, 최상욱, 리봉원)이 새로히 충원되었으며 이는 군지휘계통에 第二世代들이 크게 진출했음을 나타낸 것이다.

金正日體制의 軍事政策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에서 예시해 볼 수 있다.

- ① 北韓軍部 자체의 이익과 관련하여 적어도 당분간 軍事力增強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래와 같이 革命的 戰略을 강조하는 군사력의 增大보다는 現代戰略概念에 입각하여 北韓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데 「金正日體制」는 관심을 가질 것 같다. 다시 말해서 北韓武器體制의 현대화와 더불어 효율적인 지휘체제확립을 도모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軍部 자체 내에서도 世代交替가 이루어져 과거의 革命的 第一世代 보다는 正規軍事教育을 받은 戰後 第二世代들이 주요 지휘계통에 들어섬으로써

더욱 가능해질 것이다. 어느 의미에서 새로운 世代의 군부세력은 軍에 대한 政治의 간섭을 극소화시키면서 軍 자체의 전문적인 지휘체제 확립과 현대전략전술 무기체제의 강화를 요구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變化는 金日成이 살아 있는 한 기대하기 힘든 현상이지만 여하튼 北韓軍部가 革命的 軍隊가 아닌 전문적 군대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 ② 「金正日體制」는 軍事外交를 擴大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北韓이 새로운 군사기술을 도입하는데 있어서나 또는 북한이 만든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는데 있어 다 같이 이익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北韓이 군사외교를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두가지 서로 상이한 목적들이 내재하고 있다. 한가지 목적은 소련 및 중공과의 접촉과 교류를 擴大하여 고도로 발달된 現代무기들을 공급받거나 혹은 무기제조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또다른 목적은 第三世界國家들에 대해 北韓이 만든 무기들을 판매하는 것이다. 북한이 中共과 소련에 대해 일종의 등거리外交를 전개하고 있지만 현대무기를 제공받거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中共보다는 소련에 더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北韓이 中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해도 安保上의 문제와 관련시켜 볼 때는 소련과의 관계유지가 불가피해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과거부터 北韓은 第三世界の 분쟁지역에 대해 많은 무기판매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로는 1982년 한해만 해도 北韓은 이란에 약 10억불상당의 무기를 수출했다고 한다.²²⁾ 「金正日

體制]는 이와 같은 第三世界에 대한 무기판매를 계속 擴大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北韓의 악화된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데도 도움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第三世界에 대한 北韓의 영향력 증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③ 「金正日體制」는 종래 北韓이 강조해 온 「三大革命力量路線」이나 「四大軍事路線」을 그대로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 理由는 그러한 軍事的 路線들이 단순히 對南革命路線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北韓과 같은 「兵營國家的 體制」(A Garrison State)를 유지하는데도 有用하기 때문이다. 金正日과 그의 지지자들은 北韓社會의全體主義的 構造로 보나 또는 그들 자신의 權力基盤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도 그와 같은 軍事的 路線에 바탕을 둔 北韓住民들의 조직적 동원을 계속 필요로 할 것이다.

4. 對外政策的 側面

北韓政權은 대내적으로 폐쇄체제를 강요하고 있으나 對外的으로는 종래의 孤立政策을 탈피하고 국제사회에 진출하려는 對外政策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政策은 특히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北韓은 1970년대에 들어서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한 것을 비롯해서 유엔에 옵서버자격으로 常設代表部를 두기에 이르렀다.

北韓의 對外政策은 대체로 3가지 方向에서 그 전개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對中共·蘇聯과의 관계에 중점을 둔 共產國에 대한 政策이며 둘째로 第三世界國家들과의 關係擴大이고 그리고 셋째로 美國·日本을 비롯한 對西方國家들에 대한 接近이다.

北韓은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中·蘇紛爭의 틈바구니에서 두 共產大國들과의 外交的 軍事的 關係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中·蘇紛爭의 와중에서 北韓共產主義者들이 채택한 外交路線은 소위 「主體思想」에 기초한 「自主外交路線」이었다. 이 路線은 1966년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실제로 中共이나 소련의 어느 한편에도 지나치게 기울어지지 않고 일종의 「등거리外交」를 펴나가는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北韓은 그의 對外政策의 基軸인 中共 및 소련과 어느정도 소원한 關係를 유지해 온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中共에서 文化大革命이 한창 일때 北韓은 中共과 疎遠한 關係를 유지한 반면 소련과는 비교적 친근한 關係를 형성시켰다. 1966년 北韓은 소위 自主路線을 선언하면서 中共을 敎條主義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반해 北韓은 동년에 소련과 長期經濟協定(1966-1970)을 체결하는 등 親蘇政策을 취했다. 1967년에 이르러서 中共紅衛兵壁報는 北韓의 金日成을 “대부르조아지”라고 비평하기도 했다.

한편 中·蘇紛爭이 점차 共產陣營內에서의 主導權 爭奪戰으로 전개되면서 北韓은 이에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利用하여 두 共產大國들로부터 外交的, 物質的 援助를 받아내는데 관심을 갖기도 했다. 소위 「自主路線」이 北韓外交에 있어 갖는 한가지 긍정적 측면은 바로 北韓이 中·소분쟁에서 취한 적극적 中立路線을 正當化시켜 주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그의 地位를 어느정도 고양시킬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련과 中共이 서로 분쟁을 격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北韓은 자주적, 中立的 立場을 취함으로써 對外的

으로 명분적 이익은 얻을 수 있었지만 1950年代와 같이 두 공산대국들로부터 기대했던 만큼 경제적, 군사적 원조는 얻어낼 수 없었다. 때로는 中·蘇紛爭이 국경충돌로 까지 격화되고 월남戰이 擴大되는 동안 北韓은 對外的 安全에 대해 不安感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北韓은 점차 소련에의 依存度를 줄여가는 東歐諸國들 과도 국가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상호유대관계를 유지해 왔다. 北韓은 이미 1950 년대에 동구제국들과 쌍무적인 友好協力·相互援助 및 文化交流들을 체결했으며 이들을 바탕으로 상호간에 人的, 物的的交流를 증대해 나갔다. 그러나 1960年代와 70年代를 통해 특이할 만한 현상은 北韓이 對東歐圈外交에서 소련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불가리아, 폴란드, 東獨 등과는 어느정도 疎遠한 관계를 유지한 반면 1961年 소련과 단교한 알바니아와 그리고 소련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로선을 취한 루마니아 등과는 비교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이다. 그리고 北韓은 東歐國家 중 유일하게 中立路線을 표방한 유고슬라비아와는 1960年代에는 修正主義國家로 혹평했으나 1970年代에 들어서 金日成이 유고를 방문(1975년)하는 등 점차 양국간에 관계개선을 추구해 나갔다.

대체로 중공과 소련을 포함한 共產國家들에 대한 北韓의 對外政策이 적극적 中立路線에 따른 현상유지에 그친 반면 그의 第三世界外交는 1970年代에 들어서 커다란 進展을 보았다. 北韓은 1955년 「반동회의」가 끝난 후 1956년부터 第三世界國家들과의 관계수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北韓은 1956年 4월에 로동당 3차 大會를 통해 「반동회의」에서 채택된 5個原則²³⁾에 입각해서 非共產國家들과도 外交關係를 유지하겠다는 政策을 표명했다. 北韓의 第三世界外交는 中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예를 들면 1963년 第二次 반동회의를 앞두고 中共代表團이 아시아, 아프리카지역을 순방할 때 北韓은 中共의 뒤를 이어 代表團을 동 지역에 파견하여 이 地域의 국가들과 관계개선을 도모했다.²⁴⁾ 北韓은 1975년 8월 「리마」에서 열린 非同盟外相會議에서 正式 會員國으로 가입된 이래 대부분의 第三世界國家들과 外交的, 經濟的, 文化的 諸側面에서 긴밀한 協力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北韓이 과거에 植民地 支配의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外交的으로 非同盟路線을 선언하고 있는 第三世界國家들과 관계개선을 擴大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中共의 支授 이외에 北韓 자신이 표면상 反帝·反植民主義와 自主的 外交路線을 내세운 것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第三世界國家들과 北韓이 적어도 理念上 共通된 利益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北韓의 第三世界에 대한 外交的 浸透가 어느정도 용이해 질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北韓이 이와 같이 第三世界外交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목적은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서 한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立場을 차지하고 나아가 韓國을 外交的으로 孤立시키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이는 非同盟會議가 열릴 때 마다 北韓이 한반도문제를 상정해서 자신의 立場에 대한 支持를 획득하려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北韓은 美國과 日本을 포함한 對西方外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公式的으로는 「反帝·反支配主義」를 外交目標로 내세우고 있으면서 北韓은 근래에 들어서 對美·對日外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北韓은 「資本主義國과의 親善關係發展」에 목표를 두고 對西方外交를 다각적으로 擴大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北韓의 對西方外交는 시기적으로 1970 년대에 들어서 本格的으로 나타나

기 시작했으며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東北亞의 國際情勢가 利害關係로 變化된데 크게 자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西方諸國에 대한 北韓의 外交活動은 두가지 方式을 통해 행해지고 있다. 하나는 民間水準의 「人民外交」의 方式이며 또 다른 하나는 政府間 수준에서의 外交的 接近方式이다. 현재 北韓은 표면적으로는 反美鬭爭을 역설하고 있지만 민간수준에서 美國과의 접촉과 교류를 증대시키고 있다. 마찬가지로 北韓은 正式外交關係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日本과 非公式的 水準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분야들에서 상당한 정도의 교류를 증대시키고 있다.

北韓이 美國과 日本을 비롯한 西方國家들에 대해 外交的 接近을 도모하는 이유는 政治的으로 이들 국가들에 대한 北韓의 이미지를 改善시키면서 동시에 韓國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支持를 약화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北韓이 西方國家들과 貿易關係를 확대시키며 이들 국가들로부터 자신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앞으로 「金正日體制」에 있어서도 이상과 같은 北韓의 對外政策의 기본방향이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金正日體制는 그러한 기본방향을 전제로 해서 北韓의 對外的 地位向上에 보다 더 적극적인 外交戰略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 일층 더 확고해 지며 동시에 北韓이 국제사회에서 유리한 位置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첫째로 金正日體制는 中共과 소련 그리고 비동맹외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고나 루마니아와 긴밀한 協力關係를 유지하는데 관

심을 가질 것이다. 中共과 소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自主路線」을 견지하면서 보다 더 실질적인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최근에 일어난 中·蘇간의 협상재개등과 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北韓으로 하여금 두 공산대국들에 대한 接近에 어떤 새로운 戰略을 要求하게 될지는 몰라도 北韓은 다소간의 融通성을 보이면서 이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시켜 가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다.

둘째로 「金正日體制」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第三世界外交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지난 第六次 黨大會에서도 北韓은 「非同盟運動의 擴大發展」이 對外政策의 主流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구체적으로 貿易不均衡의 시정, 公正한 경제관계의 수립등을 포함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확립을 내세움과 동시에 「外軍撤收」와 「非核地帶設置」등을 주장하여 第三世界國家들의 관심을 끄는데 중점을 두었다. 北韓의 第三世界外交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韓國과의 外交的 競爭에서 北韓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려는데 목적을 둔 것인 만큼 「金正日體制」도 韓國의 第三世界外交를 견제하는 등 이에 보다 많은 努力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北韓의 對美, 對日接近이 金正日體制下에서도 계속 擴大될 것으로 추정된다. 北韓은 美國에 대해 政府간의 접촉에도 관심을 갖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수준에서의 양국민들간의 접촉을 확대하여 美國人들로 하여금 北韓에 대한 理解를 깊이 하도록 하면서 親北韓勢力을 형성시키는데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美國과 무역을 포함한 경제교류도 확대하여 北韓이 필요로 하는 美國의 상품과 자본 및 기술을 도입하려고 할 것이다.

日本에 대한 北韓의 이해관계는 특별하다.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北韓과 日本과의 관계는 오랜 관계를 갖고있다. 北韓 - 日本關係는 아직 正式外交關係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1953년 韓國戰爭이 끝난 이래 계속 비공식적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日本國內에는 「조총련」과 같은 親北韓團體가 있으며 또한 日本 社會黨, 共產黨 그리고 일본 좌익적인 자민당세력이 北韓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앞으로 「金正日體制」는 日本이 南·北韓에 등거리 외교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日本과의 正式外交關係의 수립에 관심을 갖일 것이다. 혹은 正式外交關係가 수립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金正日體制」는 北韓과 日本간에 「貿易代表部設置」와 같은 것을 日本에 대해 좀더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5. 對南戰略的 側面

分斷된 이래 北韓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共產化統一에 기본목표를 두고 두가지 戰略들을 적용해 왔다. 그 두가지 戰略들이란 무력사용을 포함한 革命戰略과 고려민주연방제와 같은 통일제안에 기초한 平和攻勢였다.

「金正日體制」의 등장과 더불어 주요한 관심은 앞으로 北韓이 對南關係에서 어떠한 戰略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데 집중된다. 두가지 극단적인 견해들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로 金正日體制는 좀더 과격한 모험주의적 對南戰略을 적용하여 한반도내에서 긴장을 조성시키고 동시에 한국의 安保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見解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見解는 北韓이 계속 武力赤化統一의 의도를 버리지 않고 이를 위해 軍事力을 증강시키고 있다는 점과

「金正日體制」가 아직 안정된 기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對外的으로 危機를 造成하여 對內的 安定을 유지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특히 金正日의 個人性格이 오만하고 난폭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끄는 北韓의 權力體制는 한국에 대해 더욱 好戰的 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南北韓關係의 장래에 대한 비관적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로 「金正日體制」는 보다 더 合理的이고 非暴力的으로 南北韓關係의 해결을 모색하려고 할 것이며 그 결과 한반도에도 적어도 東西獨과 같은 理解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見解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낙관적 견해는 몇가지 근거에 바탕을 두고있다. 즉 ① 金正日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은 金日成과 같은 革命의 第一世代들과는 달리 모험주의 보다는 實利를 추구할 것이며 혁명이나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고 또 정규교육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무력사용에 의한 統一보다는 한국과의 平和共存을 원하려고 할 것이다. ② 北韓 자체가 한국과의 긴장관계유지에 필요한 軍費支出에 어떤 限界를 인식하여 한반도에서 현상유지와 함께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③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제 환경이 「金正日體制」로 하여금 對南關係를 평화적 방법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大強國들이 한반도에서 戰爭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오히려 「두개의 코리아」政策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支持하고 있기 때문에 「金正日體制」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두가지 상충적인 見解들을 어느 정도 절충해서 앞으로 「金正日體制」가 對南關係에서 취할 方向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金正日體制」는 당분간은 南北韓關係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적응을 모색하기 보다는 현재와 같은 상호간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고 적대적인 긴장고조의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對內的으로 자신의 體制安定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록 「金日成 - 金正日라인」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北韓權力構造內에서 革命的 第二世代들과 軍部勢力들로부터 支持를 얻기 위해서 「金正日體制」는 어느 일정기간 동안 對南 强硬路線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계속해서 「金正日體制」가 그와 같은 강경로선을 견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주변국제관계가 그러한 對南强硬路線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될 것이며 또한 北韓 자체가 軍備增強등 많은 대가를 감당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金正日體制가 對南關係에서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세가지 조건들이란 ① 北韓에서 「金正日體制」가 안정화되는 것과 ② 韓國에서 정치사회적 안정과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것 그리고 ③ 국제환경이 계속 和解무드로 진전되는 것 등을 말한다. 특히 한반도 주변정세가 악화되어 강대국가들 어느 하나(예를 들면 소련)가 팽창정책을 추구하여 北韓을 자극할 경우 「金正日體制」는 한반도에서 강대국에 의한 「代理戰爭」을 감행할 유혹을 전적으로 배척하기 힘들 처지에 있게 될지도 모른다.

언제나 南北韓關係는 상대적인 상호작용관계에 의해 決定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韓國이 어떠한 對應姿勢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 北韓의 金正日體制의 對南戰略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四. 結 論

지금까지 다방면에 걸쳐 北韓의 「金正日體制」가 취할 政策方向에 관해 알아 보았다. 本質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연구대상이지만 전반적으로 「金正日體制」의 政策方向은 다음과 같은 點에서 예시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① 「金正日體制」는 보다 더 실리적인 측면에 바탕을 두고 모든 政策을 결정, 집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교조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革命的 動員體制를 유지해 온 金日成의 통치방식과는 다른 次元에서 「金正日體制」가 北韓을 통치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北韓에서는 앞으로 二元的 權力構造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즉 金日成을 신격화하여 상징적 존재로 추켜세우는 한편 실제적인 權力行使는 金正日和 그의 支持勢力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때 「金正日體制」는 겉으로는 主體思想등과 같은 名分論에 의존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현실에 바탕을 둔 全體主義 獨裁體制를 강화시켜 나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한 獨裁體制는 기술관료들에 의해 뒷받침 될 것이다.

② 「金正日體制」는 계속 外交的 膨脹에 목표를 둔 政策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특히 第三世界國家들과 美國, 日本을 비롯한 西方國家들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데 「金正日體制」의 主要한 政策目標가 설정될 것이다. 이러한 政策方向은 北韓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타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金正日體制」의 正統的 基盤을 견고히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北韓이

계속해서 對外的 擴大政策을 추구해 나갈 경우 그 영향은 對內的으로 北韓이 더 이상 폐쇄구조를 유지해 나갈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北韓共產主義者들이 직면한 최대의 디렘마(Dilemma)이다. 그러나 「金正日體制」는 어떤 方式으로든 이 「디렘마」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金正日體制」는 金日成에 의한 唯一體制를 점차 官僚支配에 의한 獨裁體制로 전환시키면서 社會福祉增進에 목표를 둔 諸般 政策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北韓의 對外的 關係擴大를 위해 韓國과의 심한 外交戰略的 競爭을 전개하는데에 「金正日體制」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註

- ① 鄭鎮渭, “北韓世襲後繼體制에 관한 研究”, 國際問題, 154 號,
(1983年 6月), PP.86-87.
- ② 李容弼編著, 北韓政治: 이데올로기와 變化 (大旺社, 1982年),
PP.46-47.
- ③ Ibid., P.48.
- ④ Kwon - sang Park, “North Korea under Kim Chong - il,”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1, No.2, June 1982,
PP.61-62.
- ⑤ 金正日の 偶像화작업에 관해서는 孫仁燮, “金正日後繼體制確立과 葛藤
相”, 北韓, 1982. 5. 참조
- ⑥ 北韓權力體制的 개편에 관해서는 Kwon - sang Park, op.cit.,
PP.62 -69 참조.
- ⑦ 裴名五, “金正日は 軍部를 장악했는가”, 北韓, 140 號 (1983年 8月),
PP.126-127.
- ⑧ 李容弼, op.cit., P.157.
- ⑨ 근로자, 1975年 3月號, PP.17-36.
- ⑩ 北韓에서의 技術관료계층의 증대와 이들이 갖고있는 心理的 屬성과 價
值體系에 관해서는 Kwon - sang Park, op.cit., PP.71-72 참조
- ⑪ 市場社會主義政策을 취한 대표적인 國家는 유고슬라비아이며 이 政策
의 특징은 經濟政策決定過程에서 地方分權化를 도모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朴基赫, “農業政策과 發展”, 韓國共產圈研究協議會, 北韓의

오늘과 내일 (法文社, 1982), P.199 참조.

- ⑫ Kwon-sang Park, op.cit., PP.72-73.
- ⑬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vember 14, 1981.
- ⑭ 朝鮮中央年鑑 (평양, 1978), PP.82-91.
- ⑮ 1972年에 제정된 北韓憲法 第21條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는 社會主義的 協同경제제도를 공고히 발전시키며 協同團體에 들어 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協동단체소유를 점차 全人民的 所有로 전환시킨다.”
- ⑯ 鄭相勳, op.cit., P.173.
- ⑰ Ibid., PP.154-155.
- ⑱ 北韓政權은 北韓住民들을 51個 계층으로 세분하여 이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自由評論社, 北韓 共產集團의 強制勞動 (1978), PP.49-56 참조.
- ⑲ 五戶擔當制는 북한의 每5가구마다 열성당원 1名을 배치하여 감시하도록 한 통제 장치이다.
- ⑳ 朴容憲, “北韓의 政治教化教育”, 北韓教育論, 1977, P.279.
- ㉑ 北韓의 군사력에 대한 자료는 英國國際戰略問題研究所 (I. I. S. S), The Military Balance : 1983 ~ 84, 참조.
- ㉒ 朴熊緒外, 北韓軍事政策論 (慶南大 極東問題研究所, 1983), P.187.
- ㉓ 五個原則이란 ①領土保全과 主權尊重 ②非同盟 ③內政不干涉 ④平等互惠 ⑤平和共存등이다.
- ㉔ 國土統一院, 北韓概要 (1980), P.245.